

머리말

『네트워크와 국가전략: 세계정치의 변환과 연속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책에 묶은 글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 Korea)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물 중의 일부이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SSK 1단계에는 서울대학교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팀과 중앙대학교의 <한국 국익론: 이론·역사·실천> 연구팀의 둘로 나뉘어 진행되다가, 2013년 9월 SSK 2단계에 진입하면서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 연구단으로 통합하여 세계정치의 변환과 연속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책에는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물 중에서 양 연구팀의 통합 취지와 새로이 결성된 연구단의 어젠다에 잘 부합하는 12편의 글들을 추렸다.

이 책을 엮은 공통주제는 네트워크와 국가전략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變換, transformation)을 상징한다면, '국가전략'은 19세기 중후반 이래 바깥세상의 변환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천적 과제를 담고 있다. 변환의 세계정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내용으로서 이 책의 필자들이 염두에 둔 것은, 19세기 부국강병 게임에 임하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전략이라기보다는, 21세기 신홍권력 게임을 벌이는 '네트워크 국가'의 전략이다. 물론 이러한 '변환'의 구조와 동학을 살펴보면서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연속성'의 저력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i) 정치외교와 정치경제 분야에서 본 다자협력의 네트워크, ii) 기술경제와 국제규범 분야에서 벌어지는 표준경쟁과 국제규범, iii) 개발원조 및 파병외교 정책과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국내 정치과정 등이다.

〈제1부〉 '다자협력의 네트워크'의 제1장 '네트워크로 본 BRICS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은 21세기 글로벌 세력전이의 중심에 있는 BRICS 협력메커니즘의 특징을 복합 네트워크 개념으로 포착해내려고 시도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BRICS는 정상회의체로 발전하고 국제정치적 가시성을 증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BRICS는 초기 여러 비공식 정부협의체들이 병렬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의 토대를 쌓은 데 이어, 정상회의체의 정례화와 행동계획의 도입으로 공고화되었다. 복합 네트워크로서 BRICS는, 협력의 주체로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상위정치 및 하위정치 이슈를 포괄한다. 이로써 BRICS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의 장기적 모멘텀을 이어갈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공통의 정체성이 미약하고 회원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이해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장 '다자협력과 네트워크: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는 아시아의 금융감독 거버넌스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지역경제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시아 판 국제금융기구나 감독기구를 설립하자는 여러 구상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활동에 지역 정부, 준정부기관, 비정부 행위자,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동참하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3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국제결제은행아시아협의회 등 범지역 및 글로벌 금융기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금융감독 행위자들의 중첩성과 연계성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약에 비공식적 구속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함으로써 지역 금융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제3장 '정부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 G8의 사례'는 1970년대 석유과동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경제의 혼란은 세계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첫째, 케인즈 학파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통화량 조정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가 부상하게 되었다. 케인즈 학파의 정책 제안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된 반면, 통화론자들은 1970년대 세계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기체로서 G6/G7의 등장이었다. 지식체계 간 경쟁과 G6/G7 출범이 동시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G6/G7는 자연스럽게 지식체계 간 경쟁의 장소가 되었다. 1970년대 G6/G7에서 주요 쟁점은 성장·고용과 물가안정이었다. 케인즈 학파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불황 탈피를 권고했고, 시카고학파는 통화량 조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는 케인즈 학파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고전적 통화론자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G6/G7내부에서 쟁점 간 경쟁과 지식체계 간 경쟁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통화주의가

G6/G7에서 수용되면서 해소되었다. 통화주의와 G6/G7의 결합이 현재 까지 이어져 G8 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 지식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제4장 ‘다자협상에서 중개자의 역할: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 과정에서 이시영 전 외무차관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는 이시영 전 외무차관이 APEC 고위실무대표회의 의장으로서 1991년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동시 가입을 위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공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시영은 APEC 2차 각료급회의와 고위실무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동시 가입을 위하여, 순방 외교를 여러 차례 전개하였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입장이 상충되는 두 협상 공간(APEC 회원의 성격과 국호 쟁점)에서 쟁점 간 연계를 통하여 절충점을 찾은 후, 실질적 이득, 감정 이입, 시간 압박을 통하여 중국, 대만, 홍콩이 APEC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협상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사례에 직접 참여했던 이시영은 ‘협상 시한과 조건을 명시한 APEC의 위임’과 ‘천안문 사태 후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던 중국의 입장 변화’를 3자 APEC 동시 가입이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동아시아권 공통 문명의 유산이 협상의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증언한다.

〈제2부〉 ‘표준경쟁과 국제규범’의 제5장 ‘사이버 안보의 표준경쟁: 미국과 중국의 사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사이버 안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였다. 표준경쟁은, 기술과 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해당 분야의 질서와 담론 형성의 문제로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도 중요한 연구 어젠다 중의 하나이다. 최근 21세기의 패권국과 도전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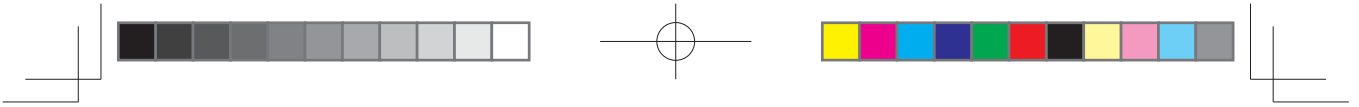
어지는 표준경쟁은 핵안보와 같은 전통안보의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21세기 국가전략의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5장은 기술, 제도, 담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3차원 표준경쟁'의 시각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중 표준경쟁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조명하고, 그러한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취할 표준전략의 방향을 기늩해 보았다. 제5장이 밝혀 낸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의 양상은 인터넷 보안 기술 분야의 패권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정권안보와 국가주권의 차원에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정당화하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제6장 '기술표준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중국 AVS 사례'는 이제까지 기술표준 설정과정을 설명해 온 기술합리성, 권력정치, 제도·담론·문화 경쟁이론들이 현재 중국 독자표준기술 설정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의 관점에서 중국 영상압축기술(AVS: Audio and Video Coding Standard) 기술표준설정 사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AVS 행위자-네트워크가 인간, 비인간 등 다양하고 이질적 행위자들로 구성되고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ANT 이론이 강조한 바와 같이 AVS 기술은 행위자-네트워크 밖에 독립적인 요소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핵심행위자의 목적과 전략에 맞추어 기획되고 구성되었으며 진화하였음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AVS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ANT가 제시하는 번역 4단계—문제제기, 이해관계부여, 등록하기, 동원하기에 따라 서술하면서 AVS 기술표준 확산 성공 및 실패의 중요한 계기들을 설명하였다. 세계 전자제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과 막대한 국내시장 규모에 토대하여 중국기업들과

일부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자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AVS는 지배적인 네트워크에 비하면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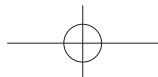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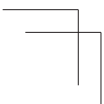
제7장 '인류공동의 유산의 국제제도화 과정: 심해저 관리의 사례'에서 조동준 교수는 심해저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1967년 몰타는 심해저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정하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관리하자는 안을 제출함으로써, 해양 선진국에게 유리한 '해양의 자유' 국제제도에 도전했다. 선진국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심해저에서 광물자원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양의 자유'가 심해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심해저 광물자원의 채취와 이로 인한 이익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외향적으로 국제해저기구가 인류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의 생산, 소비, 투자에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제7장의 사례연구는 새로운 생각과 개인 행위자가 국제제도의 형성 초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국제제도가 공식적 기구 또는 성문화되는 단계에서는 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인다.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구성주의가 국제제도의 형성 초반에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장점을 가지는 반면, 제도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제도가 공식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장점을 가진다.

제8장 '정치 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금지규범의 확산: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와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는 대인지뢰금지규범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치 환경이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와 반(反) 대인지뢰단체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보수



성향의 김영삼 행정부는 대인지뢰의 안보효과에 집중했다. 반면, 남북관계에 집중한 김대중 행정부는 대인지뢰가 남북분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진보 성향의 노무현 행정부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반 대인지뢰단체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초기 국방부와 갈등적 관계를 유지했다. 반 대인지뢰단체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내어, 대인지뢰가 인간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 반 대인지뢰단체는 인적 연결망을 통하여 정부 부처로 진입한 과거 사회운동 관여자와 함께 지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업하였다.

〈제3부〉 ‘대외정책과 정치과정’의 제9장 ‘개발협력의 세계정치와 일본의 환경 ODA 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환경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일본의 ODA 정책을 분석하였다. 2010년 ODA 규모와 비중이 각각 91억 7,400만 달러와 52퍼센트를 기록한 데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양과 질 면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다른 주요 공여국들을 압도하고 있다. 제9장의 목적은 일본이 ODA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환경 ODA에 주력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하는 데 있다. 첫째, 일본이 환경 ODA에 집중하게 된 것은 예산의 감소와 국제공헌의 증대 필요성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환경을 매개로 외교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환경을 고리로 ODA 정책과 국내 경제정책이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장기불황으로 인해 새로운 동력으로서 환경 분야를 주목한 것이다. 2008년 대외적으로 공표한 ‘쿨어스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이 녹색 기술 등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하고자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제10장 '개발원조정책과 국회: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은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에 비해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특이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국익'과 '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목표를 '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둬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제11장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은 변화하는 국제 정치의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국내 정치과정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 사례로서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국내적 논의를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사회적 합의와는 크게 관계없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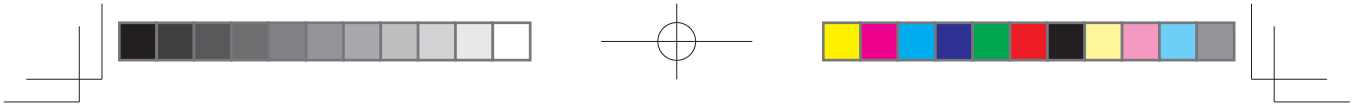
졌다. 야당은 파병과 관련하여 종종 정략적 입장으로 각색된 국가이익을 추구했다. 일부 강경파는 선명야당의 기치 아래 파병을 강력히 반대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분열된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겠다는 동기에서, 그리고 미국의 파병요청이 반복됨에 따라 이후 점차적으로 군사적·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계산 하에 파병을 밀어붙이듯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화나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대규모 해외파병이라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형성해가려는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았다.

제12장 ‘한국 정당연구의 이론 모색: 거시 역사접근의 재구성’은, 앞 장들과는 달리 세계정치의 변화와 국가전략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제12장은 정당의 역사적 인과구조를 강조한 거시접근의 연구 질문과 연구방법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거시접근의 연구질문은 주로 한국에서 대중정당이 부재한 현실과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시도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제12장은 이러한 거대질문이 여러 개의 다양한 중범위 수준의 연구질문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거시접근의 연구방법은 서유럽 대중정당의 역사적 경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 정당의 역사를 분석해왔는데, 이러한 비교역사방법은 좀 더 적실성이 높은 후발민주화 국가와의 비교 사례분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미의 주요 민주화 국가들은 국가의 선제적 발전과 정당 정치의 주변화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으며, 후발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점에서 한국 정당정치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 사례와의 비교역사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주체성, 역사연구, 사회과학 이론의 엄밀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가장 많이 고마운 분들은 아마도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라는 어젠다로 '행위자-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참여해 주신 공동 연구원 선생님들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학술회의와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사회자 및 토론자 선생님들이다. 이 책에 참여하신 아홉 분의 필자들 외에도 SSK 연구단의 일원으로 함께 연구를 수행했지만, 단지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 편집본에 참여하지 못하신, 나머지 여섯 명의 연구진(신범식, 박성우, 김경희, 박종희, 안두환, 이현미)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국내의 척박한 출판 풍토에서도 어려운 출판결정을 내려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5년 봄
필자들을 대표하여
김상배 · 이승주



차례

머리말 4

제1부 다자협력의 네트워크

제1장 네트워크로 본 BRICS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김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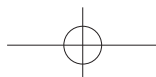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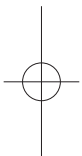
- I. 문제제기 21
- II. 국제협력과 복합네트워크론 24
- III. BRICS의 행위자 네트워크 32
- IV. BRICS의 이슈 네트워크 42
- V. 결론 47

제2장 다자협력과 네트워크: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 김치욱

- I. 서론 58
- II. 복합네트워크의 이론적 이해 61
- III. 아시아 금융감독의 거버넌스 행위자 64
- IV. 아시아 금융감독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77
- V. 결론 82

제3장 정부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 G8의 사례 조동준

- I. 들어가며 90
- II. G6/G7 네트워크 92
- III. G6/G7 네트워크와 통화주의 105
- IV. 나오며 119



제4장 다자협상에서 중개자의 역할: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 과정에서
이시영 전 외무차관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조동준

- I. 들어가며 126
- II.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창립 불참 129
- III. 난제: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동시가입 137
- IV. 순방 외교의 성공 144
- V. 나가며 154

제2부 표준경쟁과 국제규범

제5장 사이버 안보의 표준경쟁: 미국과 중국의 사례 김상배

- I. 머리말 165
- II. 네트워크로 보는 표준경쟁 171
- III. 사이버 안보의 기술표준경쟁 174
- IV. 사이버 안보의 제도표준경쟁 181
- V. 사이버 안보의 담론표준경쟁 187
- VI. 맺음말 194

제6장 기술표준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중국 AVS 사례 배영자

- I. 문제제기 203
- II. 이론적 논의 207
- III. AVS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과 확산 216
- IV. 결론 231

제7장 '인류공동의 유산'의 국제제도화 과정: 심해저 관리의 사례 조동준

- I. 서론 240
- II. 심해저 관리를 둘러싼 논쟁 242
- III. 중첩하는 갈등선 254
- IV. 국제해저기구의 양두구육(羊頭狗肉) 266
- V. 결론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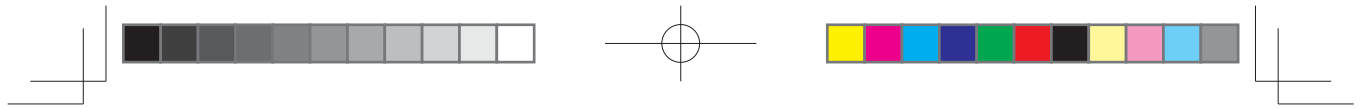
- 제8장 정치 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금지규범의 확산: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와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동준
- I. 들어가며 284
 - II. 대인지뢰의 두 얼굴 286
 - III. 정치 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의 의제화 292
 - IV.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활동 변화 304
 - V. 맺음말 312

제3부 대외정책과 정치과정

- 제9장 개발협력의 세계정치와 일본의 환경 ODA 정책 이승주·이민정
- I. 서론 325
 - II. 분석적 논의 327
 - III. ODA 정책과 외교정책의 연계 333
 - IV. ODA 정책과 국내 경제정책의 연계 344
 - V. 결론 351

- 제10장 개발원조정책과 국회: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장혜영
- I. 서론 358
 - II. 공적개발원조와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361
 - III.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변화 370
 - IV. 공적개발원조 예산 분야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375
 - V. 결론 385

- 제11장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 이상문
- I. 머리말 392
 - II. 미국의 베트남 개입 확대와 한국의 대응 394
 - III.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 406
 - IV. 맺음말 418



제12장 한국 정당연구의 이론 모색: 거시 역사접근의 재구성 장 훈

- I. 서론: 정당연구에서 연구의 주체성과 역사연구 426
- II. 정당연구에서 연구 주체성의 문제제기와 그 이후 429
- III. 거시접근의 연구문제의 주체적 재구성
 - 하나의 큰 질문에서 여러 개의 구체적 비교질문으로 435
- IV. 거시접근의 연구방법의 재구성: 주체성, 역사연구, 이론 사이의 균형 445
- V. 결론 450

찾아보기 455

저자약력 458

